

“캄보디아서 범죄자나 송환… 국내 조직 일망타진이 우선”

대검찰청 국정감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피해 줄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자 송환 반대, 이해 안돼”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란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



추미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

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벌어진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란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계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

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아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국감에도 지지율 20%대 ‘수렁’

지지율 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집값상승 ‘10·15 대책’ 與 실책에도
6월 2주차 부터 지지율 반전 없어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회 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20%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이 동통신3사가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2주차 조사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주차 조사 이후 30% 후반에서 40%대의 지지도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겨냥한 10·15 대책을 ‘주거사다리 건너차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41%의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쳤다. 경기에서도 민주당은 45%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정부·여당이 실책을 연거푸 하는데도, 지지율의 눈에 보이는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하며 ‘국감 회피’ 의혹으로 국감 기간 내내 홍역을 치렀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갭투기(전세를 낀 주택 구매) 의혹을 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사퇴했지만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았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역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장 대표를 공격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선명한 강경 노선을 천명한

장동혁 대표 취임에 뚜렷한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지지율이 주춤하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발미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불법계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해소하고 중도층에 소구할 전략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듯한 행보를 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등이 퍼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정당에 덧씌워지고 있다. 당에서 중도에 소구력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주류에서 떨어진 상태다. /박태홍 기자

與 “무정쟁주간 제안” vs 野 “관세협상 타결 시한”

‘APEC 주간’ 與野 최고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무정쟁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국익에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서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정쟁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단순한 정상외교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가 2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韓-캄보디아, 스캠범죄 공동TF 내달 가동

李 대통령-훈 마넛 총리, 정상회담
“스캠범죄 공동대응 위해 적극공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훈 마넛 캄보디아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스캠(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전담반인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훈 총리가 KLCC(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국인 전담반 내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운영방식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기로 했다. 통상 ‘코리아 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구성되는 ‘한국인 전담반’의 경우 한국인을 전담하는 기구지만 한국·캄보디아 당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에 훈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 1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즉시 조사하고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경 범죄를 퇴치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최근엔 이런 초국경 범죄를 많이 적발했다. 그리고 7월 초에는 초국경 범죄를 잡기 위해 제가 주재하는 범국가적 TF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스캠 범죄에 대한 양국의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고,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번에 ‘한국인 전담반’ 가동에 합의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